

환경친화적인 도시 가꾸기

Building an Environment - Friendly City

진철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by Chin Chul-Hoon

서울은 유구한 역사가 점철되어있고,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오늘을 만들어 낸 기적의 도시다. 인구 천만을 넘는 거대 도시이면서도 산과 강이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된 경관이 수려한 도시다.

이러한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개발' 바람은 무조건적이었다. 미래세대의 개발여지를 남겨둘 여력이 없었다. 모든 것을 지금세대가 다 이루어 놓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60~8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없었다. 공장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있을 수 없었다. 환경이 어떻고 경관이 어찌니 할 수가 없었다. 한강변을 장벽으로 둘러싼 아파트도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여겼을 정도이니 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당시 의정부시의 전기용량만큼 사용하는 대우빌딩이 들어서고, 63빌딩이 들어서도 누가 과밀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되었던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초고속 성장을 우리는 경험했고, 국민소득 만불도 머지 않았다. 그러나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간 문화유산은 얼마이던가? 산을 뭉개고 하천을 복개하는 등 망가져 가는 자연경관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길을 뚫고 다리를 놓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량적인 개발이 결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지난 94년 11월에 서울시는 남산외인아파트를 매입하여 폭파했고, 그 과정을 TV로 중계했다.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자존심인 남산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서울의 경관과 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명한 사건이었다.

서울의 자연환경은 세계 어느 도시를 따를 수 없다. 북한산과 인왕산 등 8개의 아름다운 산이 적절히 자리잡고 있으며, 그 가운데를 천년의 역사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 이러한 자연환경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훼손시키는 일을 이제 멈추어야 할 때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개발정책은 그 시대의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게 보아서

는 아니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개발논리에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서울의 미래는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처럼, 서울을 향한 우리의 인식전환만 가능하다면 결코 실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환경에서 물량공급 정책에서 삶의 질의 수준을 생각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음식을 보더라도 배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맛과 색상과 냄새에 더 관심을 두고, 먹는 것에서부터 자녀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할애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제는 남산이 망가지고 북한산이 조망되지 않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으며, 한강주변이 병풍처럼 볼품없는 경관으로 들어서는 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로운 서울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전통과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며, 천만의 인구가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억제하며, 이를 복원 보존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경관과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정책들을 개발했다. 2000년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의 적정 개발밀도를 재검토하여 하향 조정했으며,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해 제1종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회동, 인사동 등 전통문화도시를 육성하고, 풍납토성의 보존과 근대건축물의 보존방향도 세웠다.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과 하천생태기능을 회복하며 살아 숨쉬는 한강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오톱(Biotop)」생태지도를 완성하고, 중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지속가능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산자락과 한강변의 경관확보를 위한 조망경관과 수변경관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산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서울시는 1997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제 21'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틀인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재정비중에 있으며, '도심부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심부의 고도와 밀도를 정하고, 개발가능 공간과 보전공간을 설정했다. 352개소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가능 밀도를 정했다. 5개의 저밀도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만세대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8만세대의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향후 서울시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를 보다 구체적·공간적으로 들여다보며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2000년 7월 도입되었다.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한 것이긴 하지만 새로운 도시관리 틀로서 유효하게 정착되리라 본다. 현재 서울에는 60제곱킬로미터 220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시 면적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지역·공장이적지·시장 등 대규모시설 이적지와 재건축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다소 불편할지도 모른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당장 나홀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하니까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계획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과도한 밀도규제가 건설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치단체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풀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이 볼품없이 망가져 온 과거를 경험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환경과 경관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 특정 정치인이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시민들이 파수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도시와 지역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인 내가, 건축인인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이다. ㉮